

‘패스트트랙 정국’ 여야 쟁점은 제각각

오늘 ‘2+2+2 회동’...여 “검찰 개혁 핵심은 공수처 설치” 한국당 “공수처 불가”...바른미래 “선거법 먼저 처리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조국 정국’이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16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나선다.

그러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점 논의를 주장하고, 바른미래당은 ‘검찰 개혁 법안’이 아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선(先)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나아가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여야 간 찬반이 극명히 엇갈려 검찰

개혁 법안의 여야 대치 국면은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각 원내대표가 지정한 1명이 참여하는 ‘2+2+2’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전날 회동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먼저 논의될 전망이다.

2+2+2 회동의 주요 의제는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여야는 처리 시기, 법안 내용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우선 처리 시기와 관련, 민주당은 10월 29일부터 본회의에서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 소관이기 때문에 체계·지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90일)이 불필요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문화상 국회의장도 같은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정한 것부터 원천효과는 입장이다.

나아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날짜 계산에서도 한국당은 별도의 체계·지구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법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선(先)처리’ 제안에 반발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당장 민주당이 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로 공수처 법안을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전날 발언을 직접 언급하면서 “극단적 오만이자 명백한 검찰 개혁 가이 드라인”이라면서 “검찰 개혁 핵심 조치는 공수처”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장기집권 사령부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자체는 찬성이지만 구성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이런 현격한 입장차를 고려할 때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패스트트랙 정국이 이따 말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정국은 내년 4월 총선과 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여야의 극심한 대치가 예상된다. /임동욱 기자 tuim@연합뉴스

檢 특수부 46년만에 역사속으로

축소안 국무회의 통과...반부패부 3곳에만 남아

정부는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규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정치 한심” 이철희 총선 불출마 선언

단체 문자 메시지...“조국 사태, 지나치게 모질고 매정”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철희 의원이 15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단체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며 “그래서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조국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조국 얘기로 하루를 마감하는 국면이 67일 만에 끝났다. 그동안 우리 정치,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다”며 “아랑땀을 닦할 생각은 없다. 정치인 모두,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다.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는 결국 여야, 국민까지 모두를 패자로 만들 뿐”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치의 상호부정, 검찰의 제도적 방종으로 망가지고 있다. 급기야 이제는 검찰이 정치적 이슈의 심판까지 자처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어느새 저도 무기력에 길들여지고, 절망에 익숙해졌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 고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며 “더 젊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나서서 하는 게 옳은 길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글 말미에 “조국 전 장관이 외롭지 않으면 좋겠다”며 “그에게 주어진 기대와 더불어 불만도 저는 수긍한다. 그러나 개인 욕심 때문에 그 슬한 모욕과 저주를 받으면서 버텼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고통스러운 인내였다고 믿는다”며 “검찰개혁은 꼭 성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조국 없는 조국 국감

법사위 법무부 국감 민주당 “밝혀진 것 없어” 한국당 “일가 특권 누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법무부 국정감사는 당초 ‘조국 국감’의 하이라이트로 꼽혔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열기가 가라앉은 가운데 개최됐다. 다만 조 전 장관 내지 조 전 장관이 마련한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발언이 이어져 ‘조국 빠진 조국 국감’ 과도 같았다. 국감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출석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일가가 반칙과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찰 수사를 받다가 남편이 장관에서 사퇴했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갔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농락이고, 차별적인 특혜와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다”며 “조 전 장관과 라인업을 이룬 법무부 차관과 이성운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공동책임을 지고 동반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해련 의원은 “은 가족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면 버틸 수 있겠다.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당 김중민 의원은 “조국에 대해

‘범죄다, 가족사기단이다’라고 하는데 두 달 동안 밝혀진 게 없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사퇴를 요구하던 한국당이 이제는 ‘왜 사퇴하고 국감에 안 나왔느냐’고 한다”고 말하자,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한국당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사과를 요구했고, 박 의원은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맞섰다.

여야는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도 입장을

달리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라며 “법무부부터 문민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권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노력했고 특수부 폐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여야 구분 없이 몇몇 이슈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조 전 장관의 결연한 의지가 없었다면 검찰개혁안이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누가 후임이 되면 검찰개혁이 흐지부지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한국당 정정식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아니라 검찰의 탈법무부화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을 경찰청처럼 외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며 “왜 검찰의 기소권만 문제로 삼냐”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 ‘고검장의 특수수사 지휘’ 등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윤석열 육죄기까지 힘 빼기”, “윤석열 식물화”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하태경 “12월 안에 신당 창당”

11월·12월 중 조만간 선택...안철수 합류 기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5일 비당권파 의원들의 향후 거취에 대해 “11월 내로 창당이나 12월 내로 창당이나 선택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지금 (비당권파를 이끌고 있는) 유승민 대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유한국당과 연대나 통합 문제다. 자유한국당과 연대나 통합 문제만 문제로 삼냐”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 ‘고검장의 특수수사 지휘’ 등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윤석열 육죄기까지 힘 빼기”, “윤석열 식물화”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조만간 우리 내부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이 ‘탄핵을 인정한다는 조건부로 한국당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 “한국당의 근본적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현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비례대표 의원 6명이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직(상실) 여부는 조금 더 논의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포괄적으로 안철수계랑 같이 가는 데 안 전 의원이 한국에 와서 몸을 실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있다”면서 “그게 (선택의) 전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스틸방수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652 point

68247581 point

251649783 point

130758492 point

246871280 point

462810973 point

576214302 point

631749802 point

J1 4point

J2 5point

J3 6point

J5 8point

J6 10point

J12 point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